

실시간 신호정보로 국민 이동 더 안전하게 한국도로교통공단, 민관협력으로 교통안전 서비스 확대

- 한국도로교통공단, '2025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교통신호정보 민·관 협력 세미나 개최
- 실시간 교통신호 잔여시간 정보제공서비스 등 지자체 연계 현황 및 사례 공유
- 경찰청·지자체·민간기업 협력으로 국민 체감형 교통서비스 추진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연계 서비스 발전방안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23일(목)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교통신호정보의 지자체 연계 현황과 실시간 신호정보를 활용한 민간 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단, 경찰청, 전국 시·도청, 서비스 기관(카카오모빌리티, LG유플러스), 한국교통대학교가 참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시간 교통 정보 서비스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신호정보 개방을 위한 표준규격 안내·검사 제도, 시범 서비스 운영부터 현재까지 구축한 시스템과 서비스 현황을 소개했다.

긴급자동차 분야에서는 신호정보 개방을 통해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비게이션에 긴급자동차 이동경로 제공 ▲광역 중앙제어방식으로 긴급자동차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 교통신호정보는 자율주행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공단은 인천공항에서 운영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에 실시간 신호정보를 제공하여 여객 운송의 첨단화에 기여했다. 지난해 9월 공단이 개발한 ‘자율주행 협력주행을 위한 신호정보 수집·제공체계’ 기술은 자율주행 분야의 국제 표준인 미국 자율주행 규격(SAE 2735)에 채택됐다.

공단은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신호정보 시스템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남소방본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민·관 협력 기반의 교통안전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서범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은 “다가올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이 함께 교통신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제공정보 <사진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담당 부서	교통안전본부 첨단교통연구처	책임자	처 장	전옥희 (033-749-4927)
		담당자	연구원	이승철 (033-749-5979)